

# 저탄소 강원도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3G 프로젝트와 그린존 구상

진상현 강원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저탄소 녹색성장의 의의와 한계

2008년 8월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건국 60주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한 바 있다. 화석연료 고갈로 인한 유가 상승과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이런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저탄소 사회로 전환해나갈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위기를 한국의 새로운 성장기회로 만들어나가겠다는 비전은 바람직한 국가 전망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유럽으로 자동차 한 대 팔 수 없는 상황이기에 한국은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발표는 몇 가지 측면에서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태생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첫째, 이번에 발표된 녹색성장은 특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대통령이 정의한 바와 같이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서의 녹색성장은 이미 참여정부 말기에 발표되었던 기후변화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에 불과하다.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이며,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통적인 경제성장과 다른 종류의 성장, 즉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추구하는 발전을 의미하는 개념일 뿐이다. 한승수 기후변화대사를 포함해서 정부는 녹색성장이 2005년 서울에서 개최된 UN ESCAP\* 제5차 '환경과 개발에 관한 아태지역 장관회의'에서 제안된 뿌리

\*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는 UN경제사회이사회 산하기구인 지역경제위원회로 지역위원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위원회이다. ESCAP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사항 및 지역 발전방향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깊은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 2008년에 발표된 저탄소 녹색성장이 2005년에 제안된 녹색성장을 계승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당시 747성장이라는 양적 경제성장을 추구했을 뿐이지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성장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그렇다면 누가 먼저 발표했는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떠나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데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 녹색성장의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나 그린홈 100만호 건설, 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한 그린카 육성 등은 이미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이며 특별할 것이 없다. 어차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은 확대되는 추세이며, 하이브리드카는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한국 기업들이 선진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야이다.

셋째, 더 큰 문제는 녹색성장이 제2의 건국 국가비전으로 제시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탄소집약적인 산업 및 소비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전망이 제시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제시한 녹색성장을 경제주체들이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녹색성장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화석연료에 주어지는 보조금을 제거하고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탄소세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전면적인 세제개혁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실행 주체인 중앙정부의 부처개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등의 부처 간 역할분담과 조율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서 정책혼선을 빚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에 녹색성장위원회가 만들어졌기는 하지만 이 또한 기후변화를 담당하기 위한 통합조직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행정부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옥상옥(屋上屋) 형태로 만들어지는 기구에 불과할 수 있다. 따라서 녹색성장에 기반이 되는 세계개혁과 조직개편이 제시되지 못한 녹색성장은 국민들과 시장의 신뢰를 얻기 힘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실질적인 정책실행의 주체이자 중앙정부의 정책파트너인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과 지원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마저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 강원도의 기후변화 대응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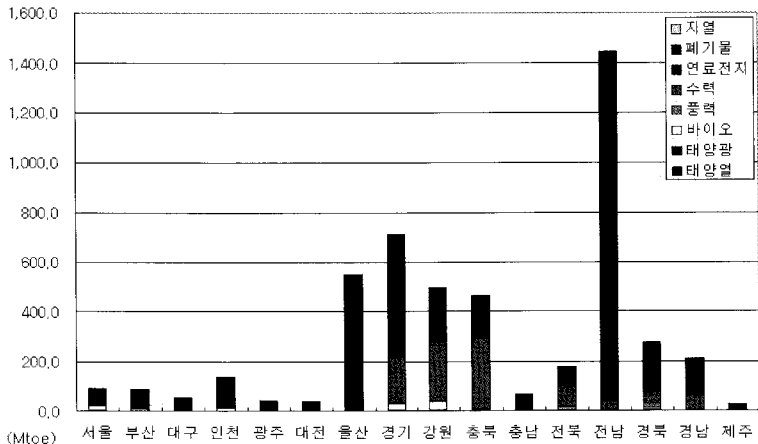
이처럼 이명박 정부에 의해 야심차게 발표된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반면에 강원도는 진정한 의미의 녹색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강원도는 녹색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자

체이다. 강원도가 지닌 자산은 생태자산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1980년대 석탄 생산지로서 한국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었다면 최근에 강원도는 바람과 물이라는 생태자산에 기반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지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해내고 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대관령 풍력발전단지는 강원도가 풍력의 선두 주자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강원도에 자리 잡고 있는 백두대간은 국내 최대의 탄소 흡수원으로 저탄소 사회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와 산림이라는 생태자산은 강원도 녹색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으며, 강원도가 16개 시도의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의 기후변화 대응 여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정책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강원도의 적합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지구적인 환경문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갖춰야할 기본적인 정책적 요건들을 강원도가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IPCC에서는 기후변화정책을 크게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이라는 두 개의 정책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산업화 이후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로 인해 나타나는 지구적인 환경문제이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완화 또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라고 한다. 현재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의해 국가별로 할당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이 전부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강원도의 기후변화 대응 여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완화(온실가스 감축) 여건을 가장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강원도의 완화여건과 관련해서는 신재생에너지와 산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온실가스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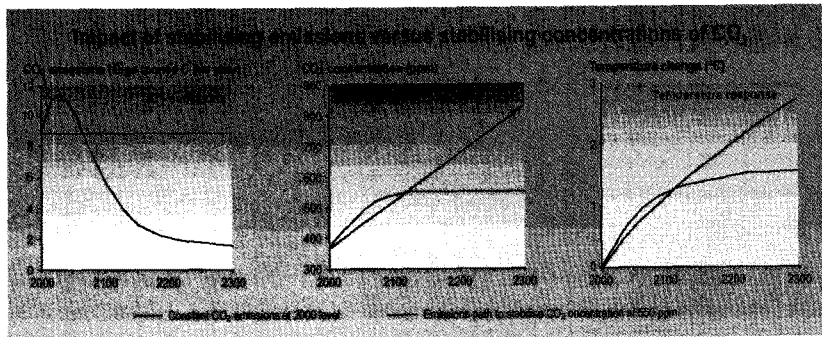
그림1  
지자체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2006년)



배출하는 화석연료이기에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감축 전략은 바로 저탄소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강원도는 국내 최대의 풍력발전단지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폐기물을 제외할 경우 강원도가 가장 많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1) 참조). 다음으로 중요한 강원도의 완화여건이 탄소 흡수원인 산림이다.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이며, 국가 전체 산림면적의 21.46%, 임목축적량의 26.91%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의 산림지자체이다. 이처럼 강원도는 국내 최대의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산림보유 지자체이자, 국내 최대의 풍력발전단지인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생산지자체로서 강원도의 경쟁력은 바로 온실가스 감축, 즉 기후변화 완화 관련 경쟁력이다.

한편 IPCC는 배출된 온실가스가 이미 대기 중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계가 지금부터 아무리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이미 진행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돌이킬 수 없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적응정책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그림 2) 참조). 기후변화 관련 적응정책으로는 세력이 강해진 태풍, 집중호우 등의 기상재해에 대한 대비 및 생태계 변화로 인한 대응전략 수립 등이 포함된다.

그림2  
적응정책의 필요성  
(배출저감, 농도증가, 온도증가)



한편 기후변화 최대의 피해지역인 강원도는 완화여건 만큼이나 적응여건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지자체이다.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가 커지는 추세이며, 특히 강원도는 국내 지자체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가장 급격히 커진 지자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기후변화 관련 재해는 강원도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은 국가 전체 피해액의 25%가 강원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최근10년 간  
자연재해 피해액(억원)

연도	전국(A)	강원도(B)	비율(B/A)	비고
1996	618,0	344,7	55,8%	집중호우(철원268mm)
1997	235,2	9,0	3,8%	
1998	1,737,7	79,5	4,6%	태풍 YANNI
1999	1,367,7	316,9	23,2%	집중호우(철원280mm)
2000	709,3	23,4	3,3%	
2001	1,387,4	252,7	18,2%	
2002	6,774,9	3,046,0	45,0%	태풍(RUSA)
2003	4,777,7	874,2	18,3%	태풍(MAEMI)
2004	1,256,7	99,6	7,9%	폭설(문경49cm)
2005	1,049,8	23,1	2,2%	대설(정읍 59cm)
최근30년	28,350,9	6,000,9	21,2%	
최근10년	19,914,8	5,069,6	25,5%	

특히 강원도는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는 태풍 루사로 인해 5.5조원에 124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2003년에는 태풍 매미로 인해 4.8조원에 117명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홍수와 관련해서는 과거 1980년대까지만 해도 농경지가 많은 남부 지역이 주로 홍수피해를 입었던 데 반해 경사가 급한 산악지방인 강원도는 홍수피해가 비교적 적은 지역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는 오히려 강원도의 홍수피해가 급격히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피해에 강원도가 가장 취약한 지역이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적응정책이 가장 절실한 지자체가 바로 강원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림3  
과거 20년 동안 홍수해로  
인한 피해지역 변동  
(자료 : 홍지혜, 황진환,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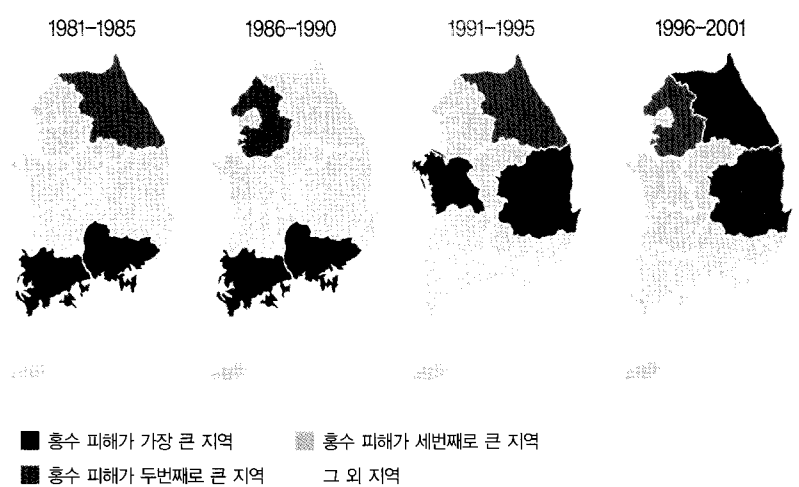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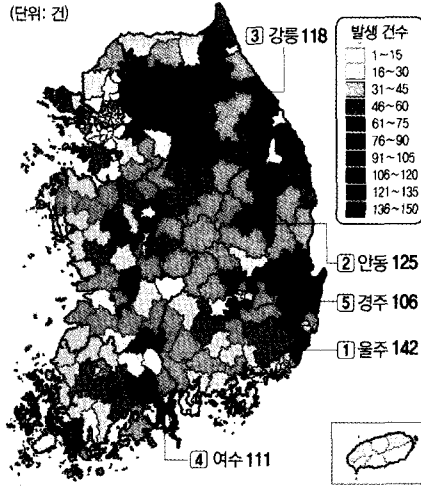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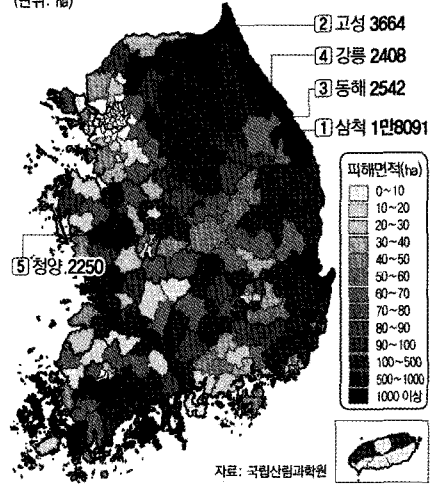


그림4  
연도별 산불이 많이  
발생한 지역

산불이 많이 발생한 지역 (1991~2007년)  
(단위: 건)



산불 피해가 컸던 지역 (1991~2007년)  
(단위: ha)



산불과 관련해서도 산림과학원이 전국 229개 시군구별 과거 17년(1991~2007년) 간의 산불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불 피해가 큰 지역 역시 강원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산불발생건수도 강원도가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산불피해와 관련해서는 압도적으로 넓은 면적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 강원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발생과 관련해서도 강원도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피해에 대한 적응정책이 가장 절실한 지자체 역시 강원도라고 할 수 있다.

# 강원도의 기후변화종합대책, 3G 프로젝트

이처럼 강원도는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해서 어떤 지자체보다도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큰 지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여건을 반영해서 강원도는 사실 중앙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발표보다 한발 앞서 4월 25일에 '강원도 녹색성장(3G: Gangwon Green Growth)'을 도정목표로 선언한 바 있다.

그림5  
강원도의 기후변화종합대책  
3G 프로젝트 발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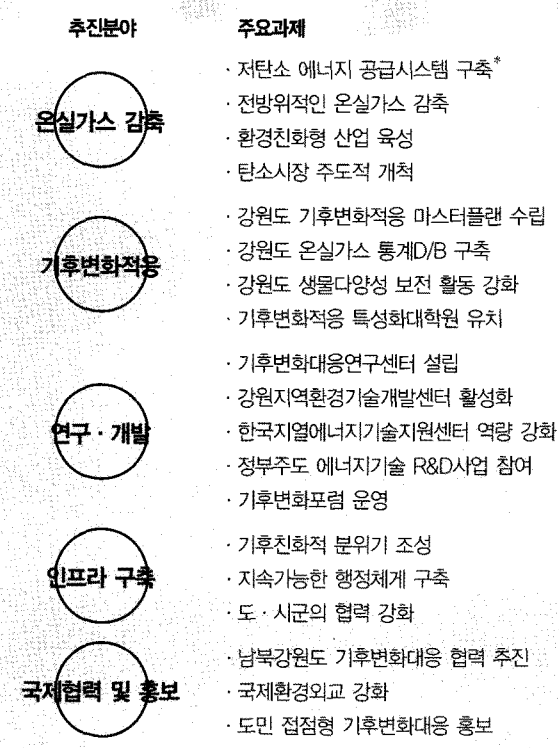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강원도는 '기후변화 위기를 강원도 가치 극대화의 기회'라는 도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기후변화대응 국가정책과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해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Policy Alignment)하고, 둘째 기후변화 관련 R&D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World-class R&D Activities)하며, 셋째 지속가능한 성장 및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Growth through Green Economy)를 추구할 계획이다.

표2  
3G 프로젝트의  
정책목표

- 온실가스 감축 : 2012년까지 2003년 대비 6%감축, 약66만 TCO<sub>2</sub>
- 기후변화대응역량 강화 :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피해 최소화
- 기후변화대응 연구기반 마련 : R&D기관 3개소 확보
- 기후산업 주도를 통한 경제적 부가치 창출 : GRDP의 5%

표2  
추진분야별 주요과제

\* 강원도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0년까지 7%, 2015년까지 10.5%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강원도와 비교했을 때 중앙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목표는 2011년 5%, 2030년에도 11%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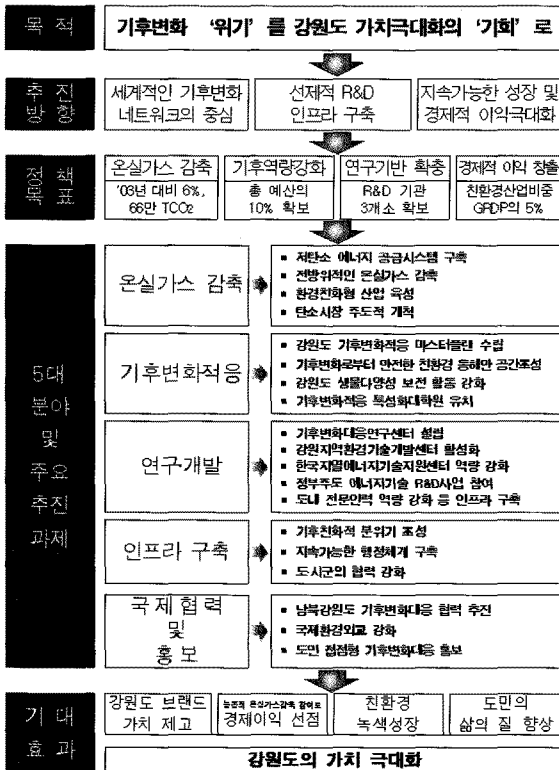


3G 프로젝트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분야별 주요과제는 <표 3>과 같다. 강원도는 이런 주요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첫째 친환경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며, 둘째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셋째 강원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는 3G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청정에너지정책과를 신설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팀을 구성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조직체계를 구성해놓고 있다. 기후변화는 한 개 부처만의 담당업무가 아니라 환경, 도시, 농정, 방재 등의 포괄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주제이기에 필요시 타 부처 및 유관기관의 협력 하에 분야별 대책전담 TF팀을 구성·운영해나갈 계획이다.

그렇지만 기후변화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추정하고, 분야별 저감대책을 수립해야하는 등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이기에 기존의 공무원 조직만으로는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에 강원도는 국내 최초로 전문성을 갖춘 기후변화대응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를 설립한 상태이다. 형태는 비영리 재단법인형태이며, 주요 기능은 정책개발, 조정·집행,

표2  
3G 프로젝트 개요





대의협력, 연구조사뿐만 아니라 교육홍보사업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조직구조는 이사장, 센터장, 운영위원, 집행기구(1국 2부)를 중심으로 국내외 저명인사 10여명의 자문단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 기후변화 대응공간으로서 강원도의 그린존 전략

한편 기후변화 관련 국내 최대의 피해지역이자 국내 최대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력과 탄소 흡수원을 지닌 지역으로서 강원도는 도 전역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범지역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는 도내 전 지역을 기후변화 대응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공간계획인 '그린존(Green Zone)'을 2008년 4월 25일에 발표한 바 있다. 그린존은 강원도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공간 상에 구현하기 위한 구상안이며, 2009년 2월 4일에는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수정안이 발표된 바 있다.

수정안에서는 탄소배출제로도시, C40기후변화리더십그룹,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 등 기존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개념들이 대부분 도시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완화정책'에 치우침으로써 종합적인 기후변화 대책으로서 '적응정책'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강원도가 제안한 기후변화대응 개념인 그린존은 기후변화정책으로서 감축과 적응이 모두 포함된 종합적인 정책이자 이를 공간 상에 구현하기 위한 지역계획이기에 그린존은 한 마디로 '강원도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이 구현되는 공간'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강원도의 그린존은 '기후변화를 선도하는 청정강원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추진전략으로 탄소배출량 감축, 청정에너지 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수자원 관리, 생태네트워크 구축 등의 '세부사업'과 청정사업 발굴, 홍보시스템 구축, 교육프로그램 개발, 국제화 전략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서 강원도의 그린존을 달성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그린존은 강원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공간구상 이기에 5개 세부권역, 즉 DMZ 생태벨트, 탄소내륙벨트, 백두대간산림벨트, 해양·바이오벨트, 청정에너지벨트로 나누어 권역별 핵심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때 그린존 기본구상이라는 전체적인 강원도의 기후변화 공간구상 안에 '탄소배출제로도시'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와 강원발전연구원은 도내에서 '탄소배출제로도시' 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1월 29일 탄소중립도시 관련 기후변화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처럼 강원도는 일찍부터 기후변화 대응 공간계획을 토대로 탄소중립도시를 준비해오고 있었지만, 실제로 도내에서 저탄소 도시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기 시작한 계기는 지난 2009년 2월 10일 강릉에서 개최된 「강원지역발전토론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도시'를 제안하면서부터이다. 당시 대통령은 청정지역인 강원도를 국제적으로 유명한 저탄소 관광지역으로 키워나가야 한다는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2월 16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통령이 강원도와 제주도를 세계적인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하라고 다시 한 번 지시함으로써 정책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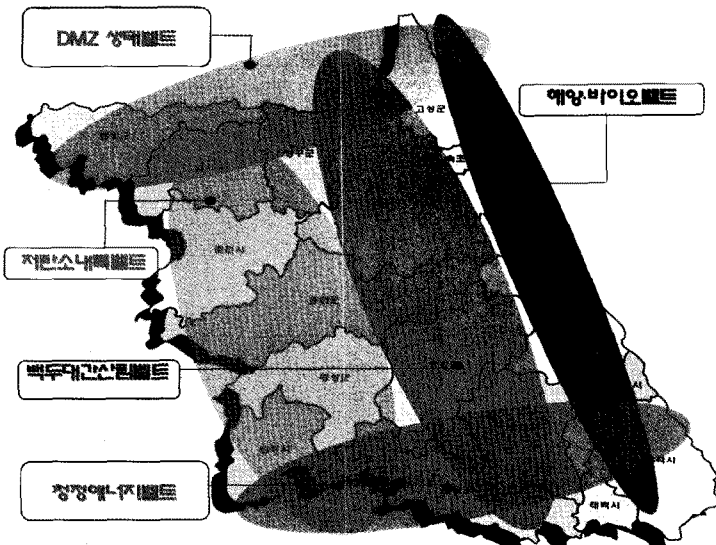


그림7 그린존 기본구상 수정안(2009.2.4 발표)



그림8 이명박 대통령 저탄소 녹색도시 제안(2009.2.11)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제안한 '저탄소 녹색도시'의 개념, 원칙, 추진방향 등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상태이다. 즉 기존 도시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전환해나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개발계획처럼 몇 만명 규모의 신도시로 추진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이 현재 진행되고는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는 저탄소 녹색도시 관련 연구용역을 강원발전연구원에 발주함으로써 2009년 중으로 세부계획을 확정짓고,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 원주시의 에너지자립마을

도뿐만 아니라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기후변화대응이 강원도 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전 지자체로 확산한다는 목적 하에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는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설정 및 기후변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기후변화대책이다. 환경부는 2007년 하반기부터 지자체와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 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과천, 제주, 창원, 부산, 광주, 울산, 여수, 원주라는 총 8개 지역과 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지자체	감축목표	테마사업
제주(2007.7)	2012년까지 절대량 기준 '05년 대비 10% 감축	기후변화 영향·예측평가·적응 프로그램 마련
과천(2007.8)	2015년까지 절대량 기준 '05년 대비 5% 감축	개인배출권할당제
창원(2007.11)	2015년까지 GRDP당 온실가스 배출량 '04년 대비 35% 감축	녹색교통 중심도시 조성
부산(2008.1)	2015년까지 BAU 대비 10% 감축	공공기관배출권 거래제
광주(2008.4)	2015년까지 BAU 대비 7% 감축	탄소은행제
울산(2008.4)	2012년까지 '05년 배출수준 유지	공익형 탄소펀드 조성 및 CDM 발굴
여수(2008.5)	2012년까지 BAU 대비 10% 감축	기후보호 국제시범도시 조성
원주(2008.12)	2012년까지 BAU 대비 5% 감축	친환경 에너지 자립형 시범마을 조성

원주시는 2008년 12월 19일 환경부와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5% 감축한다는 목표를 수립해놓고 있다. 원주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클린앤그린 시티(Clean&Green City) 전략 하에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Low Carbon House 인증 사업과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원주시는 기존의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들과 달리 친환경에너지자립형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원주시는 건강한 유기농 먹거리 운동을 추구하는 한살림 운동의 모태가 되었던 지역이다. 현재 한살림 운동은 도농간 직거래를 통해서 먹거리를 공급하는 대표적인 유기농 사업을 통해 국내에 이름이 알려져 있다. 이처럼 한살림 운동이 국내 최대의 유기농 직거래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

에는 원주에서 시작된 한살림 철학과 지역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태적 건전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동체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모두 결합될 경우에만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진상현, 2007). 따라서 이런 한살림운동의 철학과 지역공동체, 국내 최대의 도농직거래라는 네트워크를 결합해서 원주시가 에너지자립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경우 프라이부르크 못지않은 바람직한 기후친화적인 마을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원주시는 호저면 광격리와 흥업면 대안리, 부론면 손곡·법천리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친환경에너지자립형 시범마을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당초에는 이 3개 마을 중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에너지의 완전자립이 가능한 친환경 시범마을로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환경부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협약식을 맺으면서 3개 마을 모두를 에너지자립형 시범마을로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확대되었다. 1차년도 사업으로는 부론면 손곡·법천리에 40억원, 2·3차년도 사업으로 호저면 광격리와 흥업면 대안리에 50억원씩 모두 14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원주에서 추진하는 친환경에너지자립형 마을은 개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탈피해 친환경에너지 생산·활용·판매가 가능한 자급자족형 주거단지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 기후친화적인 지자체로서 강원도의 전망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앙정부가 제시한 건국 60주년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은 개념적, 실천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반면에 강원도는 국내 최대의 기후변화 피해지역으로서 기후변화 적응정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의 신재생에너지, 탄소흡수원 지역으로서 기후변화 완화정책을 가장 잘 추진할 수 있는 지자체이다. 이런 강점을 살려서 강원도는 이미 중앙정부보다 한발 앞서 강원도의 기후변화종합대책으로서 3G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으며, 강원도 전역을 기후변화 대응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그린존' 기본구상을 수립해놓고 있다. 강원도는 이런 기후변화 종합대책과 공간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담부서와 전문기구로서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재단을 설립해놓은 상태이다. 도뿐만 아니라 기초 차치단체 차원에서 원주시는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 지역의 한살림 운동에 기반한 친환경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강원도의 이런 기후변화 대응노력은 비단 강원도만의 계획에 머물지 않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강원도를 시범지구로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고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강원도와 도내 기초 자치단체가 추구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중층적인 차원의 다양한 기후변화대응노력이 실행될 경우 강원도는 전세계 어디에 내놓더라도 자랑할 만한 대표적인 기후변화대응 지자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부분은 최근 들어 국내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비슷비슷한 계획들을 경쟁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해서 지역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서 지역 차원의 '선택' 과 '집중' 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즉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고유의 기후변화대응전략을 수립해나간다면 지역 간의 마이너스 경쟁이 아닌 플러스 상생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역 고유의 기후변화대응전략 수립을 통해서 강원도의 기후변화대응 노력과 다른 지자체의 기후변화노력이 서로 상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강원도.(2008). 「강원도 기후변화대응종합대책: Green Growth 프로젝트」. 산업경제국 청정에너지정책과.
- 강원도.(2009). 「Green Zone 기본구상」. 산업경제국 청정에너지정책과.
- 강원도.(2009). 「2009 청정에너지분야 주요업무계획」. 산업경제국 청정에너지정책과.
- 권혁수·조상민·오현영 외.(2008).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5개년계획 수립 연구」. 에너지 경제연구원.
- 김인철.(2008).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대응 방안」. 2008년 기후변화포럼.
- 녹색연합.(2008). 「Local CO2 다이어트: 광역지자체 기후변화대응 현황과 대응」.
- 소방방재청.(2006). 「강원도 재해연감」.
- 에너지경제연구원.(2007). 「지역에너지 통계연보」.
- 진상현.(2007). 「사회생태자본에 기반한 대안적 지역발전모델: 독일 바이오에너지 마을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16권 제4호.
- 진상현.(2008a)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와 강원도의 전망」. 강원발전연구원 뉴스레터 79호.
- 진상현.(2008b). 「강원도 에너지 정책목표로서의 에너지 자립」. 강원발전연구원 정책브리프 제39호.
- 진상현·심영숙.(2008). 「강원도 청정에너지 기술로드맵 작성(기초연구)」. 강원발전연구원 연구보고 08-04.
- 홍지혜·황진환.(2006). 「홍수피해에 따른 지역적 취약성 변화 분석」. 환경정책연구 5권3호 통권11호.